

##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양금덕 할머니 "절대 받지 않겠다" 피해자단체 "대위변제 요건 안돼" 정부측 '변제공탁' 시도 예의주시 "日기업 빠진 국내 싸움될까 우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기업의 출연금을 조성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피고기업들의 참여가 빠진 제3자 배상안을 반대해온 피해자와 소송대리인단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한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모르겠다"며 "일본한테서 직접 사죄와 배상을 받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를 대리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김정희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3자 배상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제3자 배상안은 법률적으로 '대위변제' 성격을 띠고 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 넘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여가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대위변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일본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당초 피고기업은 재판에서 줄곧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피고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의 사죄나 참여 없는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은 일본 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피고기업의 배상 의무를 면제해 주고 국내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원재단이 민간기업의 기부금, 특히 한일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지원재단이 '변제공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그것으로 자신

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공탁소는 1심법원이 맡고 있어 양 할머니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에 공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제공탁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남아있다. 먼저 지원재단이 적법한 변제 권한자인지를 관할 법원에서 판단해 변제공탁 수리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리될 경우 제3자 배상안을 반대한 피해자들은 공탁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리가 안될 경우 지원재단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위변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우리와 피고기업의 법적 분쟁이 이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내 정부의 싸움으로 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미쓰비시중공업 배상판결과 관련해 특허권 2건에 대한 현금화명령(김성주 할머니 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현금화명령(양금덕 할머니 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여부가 확정 나지 않은 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7월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3면 김혜인 기자

## 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 강제동원 배상 방안 발표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담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

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

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원과 관련해서 "민간의 자발

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와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항지 기자뉴시스

##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